

북한의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

Online Series

2022. 01. 01. | CO 22-01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1)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 정형 총화 및 사업계획, 2) 국가예산 집행 정형 및 국가예산안, 3)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당면과업, 4) 당규약 수정, 5) 당조직사상생활 정형, 6) 조직문제, 이렇게 6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회의와 관련해 외부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였지만, 회의에 관한 북한의 공식 보도에는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았으며, 북한 공식 보도로 보건대,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경제문제, 특히 그중에서도 농촌문제 해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북한의 보도 내용을 토대로, 이번 전원회의의 정치·외교, 경제, 사회 분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그 함의에 대해 논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2021년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1) 당 및 국가정책들의 집행 정형 총화 및 사업계획, 2) 국가예산 집행 정형 및 국가예산안, 3) 사회주의농촌문제의 당면과업, 4) 당규약 수정, 5) 당조직사상생활 정형, 6) 조직문제, 이렇게 6개 의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경제문제 해결 방안 모색에 집중

이번 회의와 관련해 외부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두었던 것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였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에 관한 북한의 공식 보도에는 이런 문제가 다루어졌다는 것을 넘어서는 구체적 언급은 담겨 있지 않다.

북한 공식 보도를 토대로 판단하면, 이번 회의의 핵심 주제는 경제문제였다. 즉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실행”하는 것이었다. 이번 회의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2021년도를 평가하고 2022년도 사업계획과 사업방법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농촌문제 해결’을 별개의 의제로 선정하고 김정은 자신이 직접 나서서 정책 방향을 제시할 만큼 농촌문제에 집중했다.

북한은 2019년 말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021년 초 제8차 당대회, 그리고 이번 2021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과를 각각 신년사로 갈음했었다. 이러한 3번의 대체 신년사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대내외 정책은 2019년 2월 미북 하노이 회담 실패 이후 ‘새로운 길’로서의 일관된 노선을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미북 대결이 장기화될 것을 예견하면서 자력갱생 및 국가의 경제장악 강화에 기초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특히 국방력을 증대하는 것, 그리고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앞세우면서 당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반/비사회주의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 회의는 앞서 두 번의 회의에 관한 보도와 비교할 때, 큰 전략들은 동일하지만, 다소간 강조점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첫째, 2021년도 제8기 제4차 전원회의가 내부 문제 특히 경제문제에 일방적으로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특징적이다. 앞서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제8차 당대회의 보고들에서는 공히 국방력 증대와 대미 대결적 외교 안보 정책(제8차 당대회의 경우 대남정책도)이 핵심 주제로 설정되었고 비교적 자세히 언급되었었다. 이와 비교하면, 이번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보도에서 이 문제들에 대한 언급이 최소한에 그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둘째, 국가의 경제 장악 그리고 반/비사회주의 투쟁이 여전히 언급되고 있지만, 그 구체성과 언급 빈도가 과거에 비해 약화되었다. 사회주의 정치의 기본방식이라 했던 인민대중제일주의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국영사업 발전의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고, 사상교양 강화 문제도 언급되지 않았다. 농업대책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제정책 기조는 여전히 국가 주도 경제장악과 경제문제 해결이 원칙이지만, 이번 회의는 이를 강조하기보다는 관련 정책을 제시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당주도 시스템 정치와 ‘내핍과 헌신의 이데올로기’ 강화

2021년 북한의 행보와 이번 전원회의 보도 결과에 기초할 때, 2022년 북한의 정치 방향은 ‘당의 관리·통제 하 국경봉쇄 속 자급자족과 국가방위력 강화 업그레이드’이다. 이는 제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방향(자력갱생+ 첨단전략무기 개발)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2022년 북한 정치 기조는 2021년의 연장선에서 작년의 성과와 한계에 기초하여 체제내구력 향상을 의도하는 데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이와 연동된 정치 분야 주요 특징을 전망해보자.

첫째, 통치방향 측면부터 보면, 북한은 작년에 이어 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로 최고지도자의 신년사를 대체하였는데, 이는 김정은 체제가 추구한 ‘당주도 시스템 정치’가 지속될 것임을 추정케 한다. 2021년 북한은 당주도 통치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완화 등을 의도하며 노동당 규약 개정과 함께 제1비서직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또 다시 당규약을 수정하며, 2022년 역시 “당사업을 부단히 개선하고 전당을 학습하는 당으로 만들어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하는 하나의 생명체로 되게 하며 당일군들의 수준과 능력을 결정적으로 제고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경제정책 및 지역자립 사업이 중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 “우리국가제일주의”,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지속하며, ‘자력갱생·내핍·헌신’ 기조의 김정은체제 정당성 강화를 계속 추진할 전망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과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2022년 투쟁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김 총비서는 “2022년의 투쟁은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 인민, 사랑하는 후대들을 위하여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과감하게 전개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일대 결사전”이라고 하였다. 이와 연결하여 북한의 간부와 주민들에게 “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그 어떤 만난시련도 뚫고나갈 굳은 신념과 억센 힘을 지닌 위대한 인민이 있고 올해(2021)와 같이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자력으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루어낸 귀중한 경험이 있기에 우리 당과 인민은 또다시 자랑찬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이라며, 집단주의 사상사업 강화를 제기하였다. 또한 올해 1월 1일 0시에 김일성광장에서 평양시민이 대규모로 참여한 2022년 국기계양식을 개최하며, “사랑하는 조국을 떠받드는 인민의 고결한 충성심과 강렬한 애국열의”를 강조하였다.

포스트 코로나19 모색과 규율·통제 지속

셋째, 올해에도 북한에서 코로나19 비상방역사업은 국가의 최우선 정책이 될 전망이다. 이번 전원회의 결론에서 북한은 “비상방역사업을 국가사업의 제1 순위로 놓고 사소한 해이나 빈틈, 허점도 없이 강력하게 전개해나가는 할 최종대사로 다시금 지적”한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2022년에도 북한의 국경봉쇄 기조가 지속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그럼에도 주목할 부분은 “나라의 방역 기반을 과학적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우고 방역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갖추는 것을 비롯하여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으로 이행시키는데 필요한 수단과 역량을 보강, 완비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하여 우방국인 중국·러시아를 포함하여 국제사회와의 기술협력을 다방면으로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당주도의 규율통제 사업이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전원회의 결론에서도 “전당적, 전국가적, 전사회적으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할데 대하여서와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여 사회질서와 인민의 안녕을 철저히 담보할데 대한 과업,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고 사회주의법률제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한 과업들이 언급”되고, “전당적으로 당사업에서의 형식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일대 사상전을 벌리고 당안에 혁명적규율을 철저히 확립하며 간부대렬을 순결하게, 견실하게 다져야 한다”고 언급된 것이 이를 잘 보여준다.

성과 연동의 국방과 인사

다섯째, 이번 전원회의 결론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날로 불안정해지고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은 국가방위력강화를 잠시도 늦춤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방 부문의 2022년 핵심 과업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군대와 관련해서는 “전군을 당중앙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고 당중앙의 령도에 절대 충성, 절대복종하는 혁명적 당군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며 훈련 제일주의와 무기, 전투기술기재들의 경상적동원준비, 강철같은 군기확립에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며 북한군의 위상으로 ‘노동당의 군대’ 확고화, 김정은(당중앙)에 대한 충성심 고양, 전투 대비력 향상을 강조했으며, 군수공업 분야에서는 “당 제8차대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이룩된 성과들을 계속 확대하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고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면서 대외협상력 고도화를 위한 첨단전략무기 개발 과업 지속을 제시했다. 또 사회에서는 “현대전의 요구에 맞게 민방위무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우며 훈련혁명을 일으켜 로농적위군 지휘성원들의 군사적 자질과 지휘능력, 민간무력의 실전능력을 높여야 한다”며 예비군사력 고도화를 위해 주민들이 일상적 전투 대비력을 향상시킬 것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엘리트 인사 측면을 살펴본다. 이번 전원회의 결과 새로 보선된 주요 엘리트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박정근(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정치국 후보위원 리태섭(사회안전상)이다. 이들의 핵심 경력과 직책으로 볼 때 앞서 통치 방향을 논하면서 살펴보았듯이 2022년 북한은 경제와 사회 관리사업을 중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되었던 김여정의 정치국 재진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분간 김여정은 김정은 총비서의 ‘입역할’을 하며 선전선동부에서 대마·대남 사업 관리를 지속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21명을 후보위원으로 22명을 보선하였는데, 북한의 지난해 연말 통치 양상과 올해 정치 방향에 기초할 때, 이들은 3대혁명 운동과 연결된 청년중심 사상사업, 지역자립 경제와 농업 사업, 군사기술 사업에서 성과를 낸 인물들일 것으로 추정된다.

2021년의 대남·대외전략 기초 지속 가능성

한편 대외·대남 전략과 관련해서는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 보도되었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북 및 남북협상 재개, 종전선언, 미중 대립과 북경 동계올림픽 이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함구하였는데,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환경”으로 “대내외 형세를 정확히 리해하고 정확히 판단”하여 “실제적인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는 과제가 녹록치만은 않았음을 말해준다.

다만 경제 부문에서 “극난한 환경에서 경제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강조하였고 군사·국방공업 부문 결정에서도 “국가방위력강화,”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 “국가방위력의 질적변화” 강력 추동 등을 언급한 점에 비추어 보아 2021년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바 있는, 자력갱생 버티기로 제재에 대응하며 핵무력 고도화에 나서겠다는 “견지하여야 할 원칙(적 문제들)”에는 큰 변화가

있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오히려 경화된 대미·대남 메시지 발신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21년의 대외전략 기조, 즉 ‘긴장 유지 하 기다리며 지켜보기’가 당분간 지속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경제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김 총비서의 사업정형 총화 내용을 보면, 2021년 북한의 경제 성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삼지연시꾸리기 공사 마무리,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 등을 언급한 건설 부문을 제외하면 구체적인 성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해 목표 달성 여부도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2021년 생산목표를 현실을 고려해 높지 않게 설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 생산 실적은 2020년보다 양호했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도 농업 부문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성과, 자신심을 가지게 하는 뚜렷한 진일보가 이룩”되었다고 자평하고 있는 것이 이를 시사한다. 참고로 농촌진흥청도 기상이 양호했고, 태풍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2021년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이 2020년에 비해 29만 톤(7%) 증가한 469만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따라서 2022년 북한의 식량 사정은 전년에 비해서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러한 증산에도 불구하고 식량이 부족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각 산업 부문별 정책 과제에 대해서도 평이한 내용을 언급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제재와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산업 생산 증대의 전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강조하는 측면이 한층 누그러진 점도 주목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책 기조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올해에도 큰 틀에서는 2021년과 마찬가지로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 발표

앞서 강조한 것처럼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농업 생산 및 농촌문제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에 집중했다. 전원회의 의제 중 하나로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에 대하여”가 상정되어 식량 생산 증대 및 농촌발전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정책 방안도 가장 상세히 제시되었다. 이는 제재와 국경봉쇄로 인해 경제가 어려운 데에다 이를 타개할 만한 뾰족한 대안 마련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는 문제’라도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도시-농촌 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원회의 결론의 구호에 포함된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라도 농촌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은 지역균형발전을 모토로한 김일성 시대의 ‘농촌테제’(1964년)를 계승한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농촌테제’라 할 수 있다.

새 농촌건설목표는 부유한 농촌 만들기, 농업생산력의 비약적 발전, 농촌생활환경의 근본적 개선으로 요약된다. 또한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계획에 따른 중장기적인 농촌발전전략이 제시됐으며, 농촌발전전략의 중점과제로는 농민의 정치사상의식화, 식량문제 완전해결, 농촌주민의 생활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포함됐다.

이 중 먼저 식량생산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본다.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농업생산을 증대시켜 나라의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것이 농촌발전전략의 기본과업으로 규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소개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10년간 달성할 알곡 생산목표, 축산물·과일·남새(채소)·공예작물·잡업 생산목표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이 중에서 알곡 생산목표 달성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는 불분명하다. 식량 증산과 관련하여 국가의 힘 있는 지원, 강력한 국가적 지도체계의 가동, 시·군의 역할 제고, 과학농사 등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는 않다. 더욱이 북한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주민들의 생산 유인을 높이는 것임에도 이와 관련된 방안은 크게 강조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책임제’ 수준의 유인체계가 유지될 전망이다.

농업 생산과 관련해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밀 생산에 대한 강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밀 생산에 대해서는 김 총비서가 2021년 9월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바 있는데,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나라의 알곡생산구조를 바꾸고 벼와 밀농사를 강하게 추진”하여 “인민의 식생활 문화를 흰쌀밥과 밀가루음식위주로” 바꾸어야 한다며 재차 강조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북한 주민의 주곡은 쌀과 옥수수다. 그런데 과거보다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옥수수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밀가루 수요가 증가해온 점, 그럼에도 밀가루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밀농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밀농사 확대를 위한 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전국의 농촌마을 개조사업이 “특별히 중시해야 할 과업”이라고 강조된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은 삼지연시 내 농촌을 ‘이상촌’의 본보기로 하여 향후 15년 동안 농촌을 개조해나가겠다고 농촌의 장기발전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시군발전법’ 채택을 통해 농촌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리고 이번 전원회의를 통해 “가까운 앞날에 전국의 모든 농촌마을을 삼지연시 농촌마을의 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당의 농촌건설정책이라고 다시 한 번 명확히 규정했다.

농촌 3대혁명운동의 강조 및 협동농장에 대한 특혜 조치

농촌발전전략의 실천방법은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5차 3대혁명선구자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김정운의 서한에서 지방 발전을 위해 3대혁명소조운동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향후 강도 높게 전개될 것으로 예고된 바 있다. 농촌발전전략은 이와 같은 3대혁명운동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수립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농업근로자들의 사상개조사업에서 “농민영웅, 애국농민”의 정신을 강조하고 “당과 국가, 제도의 위대성과 고마움”을 체득시키고, “집단주의” 사상의식과 생활 양식을 안착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다뤘다. 이것은 농촌에서 농장원들이 국가와 농장의 집단적 이익보다는 개인적 이익을 우선 추구하려는 행위들이 만연되어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또한 농업근로자들의 과학기술 지식과 역량을 높이는 것이 농촌진흥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통해 기술기능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에 대학졸업생들을 많이 보내라고 하였다.

한편, “협동농장들이 국가로부터 대부를 받고 상환하지 못한 자금을 모두 면제할 데 대한 특혜조치”가 취해진 것은 주목된다. 북한의 협동농장은 영농물자에 대한 국가 의존도가 매우 높고, 수매는 과도하게 이루어져 구조적으로 국가에 대한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누적된 국가 부채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자립적 농촌발전의 실현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조치는 농장의 재정 상황을 개선하고, 농민의 사기를 북돋우며,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이라는 민심을 얻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혁명적 중대조치”가 향후에도 탕감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상환을 기피하는, 소위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북한 당국이 적절히 고려해 대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청년 사업 성과 강조 및 교복과 학용품 무상 공급

2021년 사업 총화에서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지난해 2월에 개최된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자체 육성 목표 달성, 건설 중인 제약공장 및 의료 기구공장·의료용품공장 완공, 문학예술 분야의 침체 탈출, 대중체육의 활성화 등이 2021년 당해 과제들로 제시됐지만 내세울만한 성과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8차 당대회 개최 이후 “수많은 청년들이 어렵고 힘든 부문에 탄원진출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미덕, 미풍의 소유자들로 자라난 것”이 “괄목할만한 정치적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북한 당국은 5개년 계획 목표 수행을 위해 청년들을 대거 동원했는데, 그들의 경제적 기여뿐만 아니라 청년집단의 사상 및 체제 결속 그리고 노동을 통한 단련과 학습과 같은 정치적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모든 학생들에게 국가가 부담하여 교복과 학용품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당 중앙위원회의 중대 조치로 실행하도록 하는 김정은 총비서의 지시가 내려졌다. 이 조치는 곧 다가올 4월 입학식을 맞이하여 학생들에게 교복과 가방, 학용품을 김정은의 선물로 줌으로써 ‘아버이 수령’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자랑하기 위한 무상교육의 실행력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경공업 부문에서 추진된 국산화 및 현대화의 일정 성과를 바탕으로 북한 매체에서 자주 선전되던 ‘민들레 학습장’과 ‘소나무책가방’ 등이 생산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선택과 집중’의 정책 조정, 사회통제 다소 완화 전망

전원회의의 결론에서는 사회문화 분야와 관련하여 과학, 교육, 보건, 문화 분야의 사업 혁신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과업들이 제시되었다(<표 1> 참조). 과학 부문의 중점과제는 경제는 물론 전체 국가의 사업을 균형있게 동시 발전시킬 수 있는 과학기술적 실천과제를 명확히 수립하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 자립성을 높이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 긴급하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완성하는 것을 “기본과제”로 선정했다며,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를 자체로 배양, 육성하는 사업이 생산과 건설보다 우선한다고 한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서 교육 부문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혁명인재, 유능한 창조형의 인재, 사회주의후비대”를 육성하는 것이 새 세기 교육혁명의 기본목적이라고

강조됐다. 교육 부문의 세부 과제들로 수재교육 강화, 경제와 국방에 필요한 우수 과학기술인재 대규모 육성, 지방과 농촌의 교원 역량 강화, 교육조건과 환경의 현대화로 교육수준 향상 등이 제시됐다. 지난해까지 강조되던 ‘전민과학기술인재화’가 올해에는 특별히 언급되지 않은 반면에 수재교육이 강화된 점을 비추어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고려하여 교육 부문에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결론 중 사회문화 분야 주요 내용

- **(과학)** 경제 자립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완성이 기본과제, 부문과 단위에 필요한 과학기술 인재를 자체 배양 및 육성하는 것이 우선
- **(교육)** 국가적 부담으로 교복과 학용품 보장, 새로운 형태의 질 좋은 교복과 가방을 모든 학생들에게 공급 지침 하달
 - 수재교육 강화, 경제와 국방에 필요한 우수 과학기술인재 대규모 육성, 지방과 농촌의 교원 역량 강화, 교육조건과 환경의 현대화로 교육수준 향상
- **(보건)** 보건사업의 기본방향을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로 정립, 보건 부문의 물질기술적 기반 확충에 주력
- **(방역)** 비상방역사업은 국가사업의 제1순위로 최중대사, 방역의 물질기술적 기반 견고히 구축 및 방역 수단과 역량 보강, 완비
- **(문화)** 문학예술 부문의 근본적 혁신과 새 세대 문예인후비육성에 주력하여 창작창조활동의 주류집단으로 성장
 - 출판보도와 체육 부문의 선진화를 위한 노력 경주
 - 집단주의에 기초한 인민 고유의 미덕과 미풍을 사회적 기풍과 국풍으로 공고화
- **(사회통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와의 투쟁 적극 전개, 사회질서와 안전을 위한 법기관들의 역할 제고, 준법기풍 확립 및 법률제도 강화

그밖에 문학예술 부문에서 새 세대 문예인 후비 육성에 주력하여 그들이 향후 창작활동에 주류집단으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부문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문학예술 부문의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 문예 집단의 창조적 혁신을 주문하였지만 계속 별다른 성과가 없자 미래 세대의 잠재력을 키우는 것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지난해에 전당, 전국, 전 사회적으로 전개됐던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척결 운동을 올해에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에 대한 과업이 제시됐지만, 지난해에 비해 강조의 세기가 약간 누그러진 느낌이다. 또한 사회질서와 안전을 위한 법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준법기풍 확립과 법제 강화가 언급됐으나 원론적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거세게 불었던 정풍운동과 사회통제로 사회가 너무 경직됐던 것을 감안해 올해는 다소 통제의 수위를 조절하려는 분위기이다.

정책적 시사점

2022년 북한의 정치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4월이다. 김정은 당 제1비서 취임 10년(4.11), 김일성 생일 110년(4.15), 조선인민군 창건 90년(4.25)을 기점으로 진행될 정주년 사업이 주목된다. 특히 최근 북한은 김정은 집권 10년 제1의 업적으로 국방력 강화를 선전하였다. 따라서 북한 당국이 3월 한국의 대선 결과와 한미연합훈련 진행 상황, 4월 대내 정치 필요 및 군사기술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치군사적 행보를 보이며 승부수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4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1~2월 북한의 메시지에 주목하며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은 2022년에도 코로나19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봉쇄 기초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한정된 보건 부문의 재원을 비상방역사업에 집중하느라 일반 보건의료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경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영양 및 보건 부문의 국제사회의 지원이 원활이 이뤄지지 않아 일반 주민들은 물론 어린이, 임산부,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영양 및 건강 상태의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형성이 계속되고 추가적인 백신 접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서 백신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지원 방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치료제 지원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이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하에 남북 보건협력을 위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이슈 등을 이유로 북한 당국이 대외 접촉과 행보에 다시 나설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인다. ©KINU 2022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